

특별기고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하는 납세자보호관제도



채경기 광주시 법무담당관

광주 동구에 거주하는 A씨는 수년 전 사업실패로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잃어버렸지만 자동차세는 계속 과세됐고, 형편이 어려워 세금 또한 납부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 A씨는 구청 세무과에 자동차세가 더 이상 과세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현행법상으로 폐차증명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없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전후사정에 따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실상 해비세 면제 등 자동차로 인정된다고 판단해 비과세 처리되도록 세무과에 시정을

요구했고, 세무과가 이를 수용해 해결했다. A씨 사례처럼 지방세의 부과징수 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과 억울함을 해결해 주고자 지난해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의무적으로 배치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 법령위반·재량남용 등으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될 때 납세자 입장에서 권리를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민들 권리보호 업무 수행

지난해 광주시의 지방세 징수율은 96%로, 6대 광역시 중 대구·대전에 이어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광주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납세의무를 잘 지켜준 덕분일 것이다. 한편, 시민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한다면 그에 따른 권리도 보장받아야 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세금에 대한 인식이 종전 납세의무라는 수동적 자세에서 납세자 권리라는 태도로 새롭게 전환돼

시민이 곧 주인인 지방자치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장과 납세자 보호강화는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납세자 권익을 주장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행정착오 등으로 납세자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면 최선을 다해 이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물론 지방세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지방세 기본법상 권리구제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복잡하고 광범위한 지방세행정 특성상 권리구제 사각지대가 상존할 수밖에 없어 납세자별로 다양한 사정을 반영하는 별도의 납세자 권익보장제도가 요구된다.

이런 필요성으로 지난해 10월말 기준 우리시와 5개 자치구는 납세자보호관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전담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조례 제·개정이 완료된 곳은 233개(95.9%), 인력배치가 완료된 곳은 156개(64.2%)인 것과 비교해 보면, 이는 우리시가 납세자 중심의 행정으로 앞장서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올해 4월 납세자관리현장을 전면 개편해 납세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확대·강화했다.

행정착오 부당침해 바로잡아

납세자보호관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부당하게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은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돼 확정된 사항,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된다.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억울함이 있어도 어떻게 할지 방법을 모르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과 상담하시기 바란다.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방세로 인한 고충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설

‘정신질환 범죄’ 예방대책 급하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시민생명을 위협하는 사회적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사건이 국민적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늘어나는 정신질환 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정신질환자나 병력자에 의한 방화·폭행·살인 등 각종 범죄행위가 갈수록 늘고 그 피해 또한 심각하기 때문이다. 광주만 하더라도 최근 몇 년 사이 정신질환자나 병력자, 질환의심자에 의한 각종 범죄가 폭증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지역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총 617건에 달한다. 이중 폭력이 32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강도·강간·살인 등 강력범죄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피의자의 유형을 보면 정신장애가 343명, 정신이상 211명, 정신박약 40

명 순이다. 그런가 하면 사건화되지 않은 폭력, 협박, 위태 등 난폭행위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매달 광주시와 자치구 등에 신고되는 정신질환의심자에 의한 난폭행위 신고 건수가 30여건에 달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사회적 제어 시스템은 너무나 부실하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시스템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다. 정신질환의 의심자가 난동을 부리거나 이웃을 위협해도 자치단체나 경찰 등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나서길 꺼리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정신질환자의 난동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이웃의 몫이며, 관리는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 이처럼 방치하면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신질환자 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광주·전남 근로자 임금격차 대책 시급

광주·전남지역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임금 상승률도 낮아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상용근로자의 평균 한달 임금은 280만 원으로 전국 평균 325만 원보다 8.6% 수준이다. 6개 광역시 중 대구에 이어 최하위 수준인 5번째다. 2008년 이후 10년째 똑같다. 전남지역 상용근로자의 월임금은 314만 원이다. 전국 평균대비 96.5% 수준이다. 9개 도 가운데 4번째로 높은 편이지만 2013년부터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같은 기간 전남지역 근로자 월임금의 연평균 상승률은 3.0%로 전국 평균과 8개 도 평균(전남 제외, 연평균 3.7% 상승)을 못미친다.

이 같은 실정이라 광주·전남지역 청년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 지역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할뿐더러 정주여건도 수도권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광주·전남지역 인구가 고령화하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역순환이 이어져 상황이 심각하다. 경제활동 인구의 노령화로 상용근로자 임금의 양극화는 더욱 커질 것은 명약관화, 불 보듯 뻔하다. 시간문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경제계는 머리를 맞대고 청년층을 불러올 만한 대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사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으로 청년인력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현 가능한 것부터 서둘러야 할 때다.

기고

“전남, 국가 그린수소 산업 중심지 도약해야”



홍성안 광주과학기술원 석좌교수

올한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잉여전력이 발생하게 되고 발생된 잉여전력을 장기간, 대용량으로 저장할 수 있는 전력 저장 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최근 중국의 대규모 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잉여전력이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저하시키면 빈번한 정전을 유발하는 문제로, 생산된 전기를 폐기하는 사례가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30%를 넘어선 독일은 태양광, 풍력단지에서 발생한 잉여전력을 수소생산, 저장, 운송, 이용으로 슬기롭게 해결함과 동시에, 수소 경제를 견인하는 사례는 눈여겨볼만하다. 우리 정부도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수소경제 진입을 위한 구체적 국가 비전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수소 경제 핵심 분야는 크게, 수소 전지차 중심의 수소 분야 및 연료전지 발전 분야의 보급에 해당하는 수소 활용 분야, 수소생산, 저장 등 인프라 분야로 구분된다. 특히, 수소 생산 분야에서 점차적으로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방식

(Green 수소)으로의 수소 생산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한 점은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와 온실가스 감축,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연계, 에너지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과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부응하는 전남의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방향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이에 필자는 큰 틀에서 전남의 수소 경제 비전을 “국가 그린 수소 산업 중심지 도약”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전남은 국내 최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해상 풍력 잠재량 또한 국내 1위로 그린 수소 생산과 실증의 최적지이다. 최근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과 맞물려 전남의 태양광·풍력 등의 구축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간헐적인 잉여전력에 대한 배터리 ESS대응에서 한계에 봉착했다. 이에 대한 보완 수단으로 앞서 언급한 독일 사례처럼 수소 ESS를 전남이 앞장서서 준비하고 실증 테스트 베드 등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수소경제 정

책을 견인하고, 또한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켰으면 한다. 향후 10년~20년 뒤 수소에너지시대, 즉 수소경제의 비전이 달성될 때 수소이온 교환막 연료전지 기술은 보편화되어 새로 건설되는 발전소의 상당부분은 연료전지 발전소일 것이며, 가정과 상업용 건물에도 자가발전 연료전지가 설치될 것이다. 또한 운행되는 상당부분의 승용차와 택시, 버스, 트럭 등이 연료전지 차량이며, 이에 상응하여 주유소의 상당부분이 수소전지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수소충전소로 대체될 것이다. 이러한 미래 에너지 체계의 완성을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부터의 수소생산기술, 수소저장, 운송에 이르는 수소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이 중장기적으로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 전남 서남해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활용에 의한 수소 생산, 저장 및 수송의 Upstream 산업 분야는 전남이 특화하고, 수소 전지차 및 연료전지 발전 등 수소 활용 분야인 Downstream 산업 분야는 광주가 특화하는 연계, 상생을 통한 수소 산업 생태계 실행방안이 빠른 시일 내 구체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장흥경찰서 정보경비팀 김동원

실종된 ‘펫티켓’ 눈살

기지사침

일부 그릇된 반려동물 주인들의 실종된 시민의식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광주지역 유명 호수공원 등에서 간혹 목줄이 풀린 반려견들이 돌아다니고, 산책길 풀숲이나 나무 귀퉁이에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멀리서 보기에 잔디밭이 깨끗해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반려견 배설물이 널브러져 있고, 일부 산책로엔 꼭꼭 찢어 풀과 함께 배설물이 밟힌 흔적까지 눈에 띈다. 어린이가 주먹보다 조금 작아 보이는 배설물은 검은색으로 변색되기도 했고, 바짝 말라 2~3일 지난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배설물을 확인하고, 돛자리를 이곳저곳으로 옮기며 짐뭉치를 빼기 일쑤다. 한 공원 이용객은 “아이가 공원에서 뛰어놀다가 배설물을 밟고 넘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할 정도다. 일부 몰상식한 반려인 때문에 다수의 반려인들이 눈치를 받고 있는 셈이다. 반려동물에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수년 전 유명 연예인 반려견의 개물림 사고 이후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펫티켓’ 실종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고광민 사회부 차장

실제, 지난 14일 오전 9시께 해남 삼산면 충리길 한 마을에서 70대 노인이 목줄이 풀린 개에 물려 응급처치 후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이처럼, 반려동물에 따른 문제점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장 적발이 수월치 않고 단속도 쉽지 않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물론 단속에 앞서 반려인들이 올바른 펫티켓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반려동물에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수년 전 유명 연예인 반려견의 개물림 사고 이후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펫티켓’ 실종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14일 오전 9시께 해남 삼산면 충리길 한 마을에서 70대 노인이 목줄이 풀린 개에 물려 응급처치 후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이처럼, 반려동물에 따른 문제점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장 적발이 수월치 않고 단속도 쉽지 않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물론 단속에 앞서 반려인들이 올바른 펫티켓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반려동물에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수년 전 유명 연예인 반려견의 개물림 사고 이후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펫티켓’ 실종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지광장

테러, 국민이 함께 할 때 비로소 확실한 대비 가능

마약청정국이던 우리나라, 마약으로 인해 전국이 떠들썩하고 있는 가운데 테러라고 발생하지 않으리란 안심을 할 수 있을까. 현지시간으로 이달 21일 스리랑카에서 연쇄폭발테러가 발생해 사망자 228명, 부상자 450명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는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테러는 테러청정국인 우리나라도 피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2015년 파리 테러로 인

해 테러에 대한 위기의식이 대두돼 2016년 3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제정·시행하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테러센터가 신설됐고, 테러가 발생하게 되면 경찰서장을 팀장으로 초동조치팀이 초동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다. 테러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예상하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경찰력만으로 대비하기보다는 국민

들과 경찰이 함께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테러가 발생했을 시에는 국가가 혼란에 빠지며 막대한 생명과 재산을 잃게 된다. 이에 경찰뿐만 아니라 국민들 역시 테러상황 시 어떻게 대비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공공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의 예를 들면 수상한 자가 의심이 가는 가방 또는 물품을 구석진 곳에 놓고 어디론가 사라지게 된다면 먼저 폭발물 또

는 백색가루 등의 테러를 의심해 절대 물품에 손대지 말고 신속히 112에 신고하며 경찰에게 수상한 자의 이동 방향을 이야기한 후 물품 반대방향으로 대피해야 한다. 오는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광주에서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개최되고 대회 여러 종목 중 한 종목이 여수에서도 개최되는데, 세계 각국의 선수 및 관광객이 방문하는 만큼 테러 위협에 안심할 수 없으므로 경찰과 국민들이 모두 함께 테러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이다. /장흥경찰서 정보경비팀 김동원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응급질병상담 1339, ▲미아·가출신고 182, ▲여성 긴급전화 1366,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1388,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응급의료센터 1339, ▲가상번호 131, ▲법률구조상담 132,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광주남성의전화 673-9001, ▲광주여성의전화 363-7739, ▲수도고장신고 121, ▲전기고장신고 123, ▲가스사고신고 383-0019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월간) 회장 박哲弘 대표이사·발행인 김善男 주필 李斗憲 편집국장 丁正龍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98, 010-4601-5323 정 처 부 (062) 720-1060-62, 경 제 부 (062) 720-1066-67, 사 회 부 (062) 720-1050-54, 사 회 2 부 (062) 720-1043-45, 동부권본부 (061) 743-4200-01, 서부권본부 (061) 285-9816-17, 문화체육부 (062) 720-1071-72, 사 진 부 (062) 720-1040, 편집부 (062) 720-1070, 기획실 (062) 720-1005, 논설실 (062) 720-1032, 월간국 (062) 720-1006-07, 관리국 (062) 720-1012, 판매국 (062) 720-1098, 사 업 국 (062) 720-1011, 광고국 (062) 720-1016-17, 기사제보: TEL (062) 720-1050-54, FAX (062) 720-1080-82, E-mail jndn@chol.com, 광고문의: TEL (062) 720-1016-17, FAX (062) 720-1020, E-mail jnm1000@hanmail.net,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우)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삼산빌딩)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 인쇄처 주안신문인쇄부사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